

S/W 창업활성화 정책

'98년도중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을 소프트웨어 등 벤처기업의 인력양성, 기술개발, SOHO사업 등에 지원하는 한편, 벤처기업 창업후에도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 호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과장

서 언

작년말 IMF의 파고가 몰아친 후 우리나라는 고환율(高換率), 저주가(低株價), 고실업(高失業)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정부, 공공기관, 산업체 할 것 없이 모두가 구조조정을 필연으로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었다. 구조조정은 한편으로는 실업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의미한다. 경쟁력이 없는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노동인력을 이전시키려는 시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20세기 말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21세기의 핵심산업이 될 전망이며, 창의성이 뛰어난 우수한 인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의 창업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실업을 완화, 고용창출, 소득증대, 경쟁력 강화, 정보화 촉진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우수인력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면 구조조정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창업자들의 주요 애로사항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체가 창업해서 성공적 기업이 되기까지는 해결 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첫째, 창업을 위한 기반구축비용과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부담이 초기 창업자들에게는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창업을 위해서는 창업을 위한 공간과, 개발장비, 그리고 기술 및 경영정보 등이 필요는데, 이 모든 것이 영세한 초기 창업자에게는 획득이 쉽지 않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골보다는 가급적 교통이 편리하고 각종 정보와 소비자를 접할 수 있는 도시가 유리하다. 그러나 이런 곳에 소프트웨어 개발실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첨단장비와 개발 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개인 사업자가 갖추기에는 부담이 되는 것들이다. 또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 경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놓고도 유통과 판매에는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둘째,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으로는 자금을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정책자금을 어렵게 따낸다 하더라도 은행을 통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보가 있어야 하는데,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높은 불법 복제율도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창업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중의 하나이다. 불법복제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소프트웨어 개발의지를 꺾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91년의 86%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97년의 경우 67%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불법 복제율은 미국(27%), 일본(32%), 서유럽(3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다.

소프트웨어 창업 활성화 정책

정부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초기 창업비용의 감소를 추진하는 한편, 창업후에는 자금융통이나 소프트웨어의 유통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율을 낮추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창업기반 조성

정부는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에게 창업공간, 소프트웨어 개발장비, 기술 및 경영정보 등을 지원함으로써, 창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감소를 추구해 왔다. '96년에 서울 서초동에 설립한 재단법인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시작으로 '97년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했다.

그리고 '98년중에는 추가로 2개소에 지역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준비중에 있다.

또한 개별적 작업실과 더불어 간단한 공동시설과 T1급 네트워크를 갖춘 소프트웨어창업지원실의 설치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97년의 경우 서울의 충정로와 구의동, 부천, 대전 대덕, 군산 대야, 부산 수영동 등 6개소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설치했다. '98년도에는 추가로 2개소에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을 설치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창업지원실에 입주를 희망하거나, 소프트웨어지원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전화[5984-111(서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oftware.or.kr]를 방문하면 창업 또는 창업후 영업활동에 필요한 각종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금년중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기존에 존재하던 재단법인 한국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와 재단법인 한국컴퓨터프로그래ム보호회와 통합하여 가칭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만들고 법정화하여 종합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요시 되고 있는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창업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 4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국내의 업체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현지의 법률·회계·시장정보를 제공하며, 사업파트너를 알선하는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한다. 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는 분은 서울 5984-11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수출진흥부로 문의하면 된다.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 추가지원

최근 들어 정부는 정보화촉진기금 1,000억원을 소프트웨어 등 벤처기업의 인력양성, 기술개발, SOHO 사업 등을 위하여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창업전 단계에 있는 기업과 창업후에 자금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에서 주요한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으며, 관심있는 개인과 업체가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①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융자지원 Year 2000 대응 기술개발, 민간부문 정보화 사업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중소기업의 상품화 기술개발, 전자상거래 촉진 기술개발 등에 대하여 연리 65%(중소기업은 연리 6.0%) 수준으로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 이내로 소요자금의 80%까지 융자지원 하려는 사업이다. 기술개발 융자사업에 대한 접수마감은 금년 7월 3일이다.

② 중소 정보통신업체 신규채용 훈련비 출연지원 사업

중소 정보통신업체가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보", "정보화", "정보통신", "정보보호", "초고속정보통신기반" 등과 관련된 제조 또는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채용대상인력은 학교 졸업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현재 실직 상태에 있는 자이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는 '98년 6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접수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수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동 협회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전화(02-586-3411)

③ 소프트웨어 벤처창업지원사업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실을 설치하고 30개 업체를 입주시킬 방침이다. 한국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금년 7월 3일까지 입주신청 접수를 받는다.(전화 02-5984-111) 그러나 향후에도 빈 공간이 생길 경우 수시로 모집을 할 방침이다.

입주업체로 선정되면, 저렴한 사업장을 지원 받을뿐만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우대 보증 지원을 받고, 산업체 병역특례 기업선정 추천시 우

대를 받는다. 이 외에도 고가의 첨단장비를 지원하고, 고속 인터넷 전용회선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으로는 통신망을 활용하여 마케팅 및 판매가 가능한 사업을 하는 소규모 영세업체 및 예비창업자로서 업종에 관계없으나, 다만 대표자를 포함하여 종업원 총수 3인 이내의 업체에 한정되어 있다.

약 400여평 규모의 SOHO 지원실에 80개 업체를 입주시키며, 일단 입주하면 최소 사무공간과 사무집 기를 지원받고, 교육, 마케팅, 수출 등에 있어 지원을 받게 된다. SOHO 입주신청 및 문의는 한국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로 하면 된다. 전화 (02-583-221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방지

정보통신부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방지와 정품사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왔다.

검찰 등 관련기관으로 구성된 수사지도협의회에 참여하여 수사 및 단속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불법복제 핫라인을 운영하고, 단속활동시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를 통하여 인력과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펴왔다. 그결과 불법복제 단속실적이 '92년 83건에서 '97년 1,105건으로 증가했다.

불법복제 단속과 더불어 정품사용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계몽활동도 펴왔다. 인터넷과 PC 통신, 매년 2차례에 걸친 프로그램 저작권 순회설명회, 그리고 매년 5~6회에 걸친 정보처리기사 보수교육을 통하여 S/W의 정품사용을 홍보하고, S/W의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정부 등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정부 등의 소프트웨어 관련 예산의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97년의 경우 신규 PC 구입비의 10%, '98년의 경우 18%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반영되었고, '99년의 경우 25%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국무회의, 차관회의, 협조공문, 정보화추진위원회 등을 통하여 정부·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정품사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이외에도 정부는 소프트웨어 업체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98년 초에는 영세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에게 자금지원, 채무보증, 이행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지금까지 약 1,211억원 정도의 자금 및 보증지원 효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하여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을 지정하고,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병역특례업체 선정시 우대, 정보화촉진기금 지원대상 선정시 우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보증지원시 우대 등 각종 지원을 해왔다.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체가 시장의 협소성을 극복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중 소프트웨어 업체의 해외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DB 구축 등 수

출지원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결 어

벤처기업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사실 벤처기업이라는 말 자체가 성공률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이다. 그러나 성공률은 낮아도 일단 성공만 하면 그 실익이 엄청나기 때문에 벤처기업의 육성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은 창의성이 있는 우수인력이 풍부한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정부는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창업후 안정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개개 기업과 개인에게 달려있다고 확신한다. ♦

Y2K문제대응

『Y2K 추진사례』 홍보용비디오 대여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국내 Y2K문제 해결을 위한 최고경영층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외국의 Y2K문제 대응사례를 모은 홍보용 비디오를 한국 유니시스(주)와 공동제작하여 '98년 6월 20일부터 대여하고 있습니다.

○ 비디오 대여문의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홍보자료팀

전화 : 02)580-0583, 0584

○ 주요내용

- 이 비디오는 미국, 오스트리아등의 운송, 금융, 소매업의 최고경영자와 전산관련 책임자가 말하는 자사 Y2K 문제 대응 현황과 추진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